

강경과, 현 집행부 탄핵 새 집행부 구성... ‘한지붕 두노조’

금호타이어 워크아웃 발목잡나

회사측 인정 안해 勞勞·勞使갈등 심화 우려

금호타이어 강경과 노조원들이 현 집행부를 탄핵하고 새로운 집행부를 구성, 2개의 노조가 대립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다. 하지만 현 집행부와 회사 측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강경과가 선출한 새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노노(勞勞)갈등은 물론 노사(勞使)갈등도 심화될 전망이다.

8일 금호타이어와 민주노총 광주본부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강경과 노조원들로 구성된 ‘워크아웃 대응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지난 5~7일 광주와 곡성·평택 등 공장별로 새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보궐선거를 실시해 단독 출마한 김봉갑

후보를 노조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김 후보는 재직 조합원 3530명 중 3048명(86.35%)이 투표에 참여해 90.16%의 찬성으로 선출됐다.

앞서 공대위는 지난 5월26일 제3기 노조 집행부에 대한 탄핵 찬반투표를 벌여 조합원 80.7%의 찬성으로 탄핵을 가결했다.

민주노총 광주본부는 “수개월째 파행으로 치달아온 금호타이어 노조에 새 집행부가 탄생했다”며 “노조 정상화와 산적한 현안문제 해결에 전기를 맞게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 집행부와 회사 측은 ‘탄핵은 무효’라는 법원의 판결을 들어

공대위가 주도해 선출한 새 집행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광주지법은 지난달 11일 고광석 현 위원장이 제기한 ‘탄핵(해임)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현 집행부에 대한 탄핵이 의결되더라도 회사 청산까지 우려되는 워크아웃 상황에서 이뤄진 노사 합의였다는 점과 노조원 64%가 협약안에 찬성한 점을 감안하면 탄핵 사유가 없다”고 밝혔다.

이같은 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회사 측은 회사 내 투표소 설치를 허용하지 않았다. 사측은 공대위의 투표행위 자체가 적법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현 집행부도 조만간 대의원대회를 열어 사퇴를 선언하고 후임 집행부

구성을 위한 별도의 보궐선거를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져 노노갈등은 더욱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또 가처분 신청에 이어 지난 5일 ‘탄핵 결의 무효’에 대한 본안 소송을 제기해 노조의 정당성은 결국 법원 판단에 맡겨지게 됐다.

지역 사회에서는 워크아웃이 진행 중인 금호타이어가 노노갈등으로 경영 정상화에 차질을 빚지 않을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광주상의 한 관계자는 “노사가 힘을 합해도 경영 정상화의 길은 험겨운데 회사는 안중에도 없고 헤게모니 다툼이나 하고 있으니 안타깝다”며 “워크아웃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초고가 다이아몬드

8일 서울 현대백화점에서 열린 ‘다이아몬드 페어’에서 직원들이 E.S donna의 10억대 300캐럿 다이아몬드 클러치백과 ‘딕스’의 3억대 플래티넘 부케, 티아라 등 초고가 다이아몬드 상품을 선보이고 있다.

/*연합뉴스

지역 기업 성장률 ‘뒷걸음질’ ‘포스코 패밀리사’ 잇따라 설립

제조업 매출 줄고 유형자산 증가율 감소

(주)동후·(주)코스원 등 창립식 갖고 새출발

韓銀 635개 업체 분석

지난해 광주·전남지역 기업은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외 경기위축으로 전년보다 성장세가 급격하게 위축되고 안정성은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연간 매출액 20억원 이상 업체 635개 기업의 재무제표를 분석한 결과 제조업의 매출액 증가율은 전년도의 34.6%에서 -8.7%로, 유형자산 증가율은 16.6%에서 2.3%로 크게 하락하는 등 글로벌 경기침체로 성장세가 크게 약화됐다.

매출액 증가율은 자동차(-1.0%→8.9%)를 제외하고 석유정제(60.2%→24.1%), 제1차금속(38.3%→19.5%), 화학(32.7%→1.7%), 고무·플라스틱(11.2%→-14.3%), 전자제품(9.0%→6.8%) 등 주력업종 대부분이 하락했다.

대기업(36.4%→9.7%)과 중소기업(24.9%→4.1%)은 물론 수출기업(39.5%→-5.0%), 내수기업(27.3%

→17.3%) 등 모든 기업 부문에서 성장세가 크게 둔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제조업은 매출액 증가율(14.6%→9.8%)이 하락했지만 유형자산 증가율(5.1%→32.5%) 및 총자산 증가율(7.2%→18.2%)은 상승했다.

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7.0%)은 전년(7.2%)보다 조금 하락했지만 2009년 중 환율이 안정을 찾으면서 외환차손 및 외화환산손실의 감소로 매출액세전순이익률(3.2%→7.2%)은 상승했다.

비제조업의 매출액영업이익률(5.0%→5.7%)과 매출액세전순이익률(4.4%→7.0%)은 다소 개선됐다.

또 제조업의 부채비율(110.6%→95.6%)과 차입금의존도(27.0%→21.4%), 비제조업의 부채비율(105.1%→100.7%) 및 차입금의존도(25.0%→17.8%) 등은 모두 하락하는 등 안정성 지표가 개선됐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광양지역 ‘포스코 패밀리사(포스코 출자회사와 외주 파트너사)’들이 잇따라 설립됐다.

8일 포스코 광양제철소에 따르면 (주)동후는 이날 김준식 광양제철소장, 안중산 외주파트너사 협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기념 행사를 갖고 포스코 패밀리로서 첫 발을 내디뎠다.〈사진〉 광양제철소 내에 동지를 둔 동후는 195명의 직원을 두고 광양제철소 후관공장 조업지원 파트너로서 재강·연주·후관정정 공정을 담당하게 된다.

서정욱 대표이사는 창립기념사에서 “이달 말 준공되는 후관공장 조업에 필요한 인력을 선발하고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등 조업준비를 마쳤다”며 “인간존중을 바탕으로 한 노사화합문화를 조성해 글로벌 포스코 패밀리로 지속성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앞서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방호업무 전문으로 수행하는 (주)코스원도 지난달 28일 헌판식을 갖고 새 출발했다. 이 회사 직원 137명은 제철소내 시설·건물에 대한 방호업무를 맡고



있다.

코스원은 포항, 서울, 광양을 포함한 포스코 전체의 시설경비와 출입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주)포센에서 광양제철소 방호부문만을 분리해 설립된 회사다.

포스코가 출자한 사회책임기업인 ‘포스 플레이트’도 출범을 앞두고 있다.

포스 플레이트는 포스코가 보유한 기술과 경영 노하우를 지원, 지역사회 취약계층에게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사회적 기업이다. 이 회사 직원 90여명이 광양제철소 후관공장 시편가공 및 제품창고 관리를 맡게 된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한우·돼지·닭 사육 늘고

사료값 오른 젖소는 줄어

호남지방통계청 2분기 조사

광주·전남 지역에서 한·육우와 돼지, 닭의 사육은 증가한 반면 젖소는 사료비 상승 등의 여파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호남지방통계청이 발표한 ‘2010년 2·4분기 가축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광주지역 한·육우 사육 마릿수는 7000마리로 1년 전보다 27.2% 증가했고, 전남은 49만3000마리로 같은기간 15.4% 늘어났다.

최근 구제역 발생에 따른 이동제한과 우시장 일시 폐쇄로 인한 출하 감소, 가임 암소의 계절적인 생산두수 증가와 송아지 시세의 지속적 상승 등이 주요인으로 분석됐다.

돼지의 경우 비육돈 시세가 호조를 보인데다 백신 보급으로 폐사두수가 감소하면서 광주에서는 1만2000마리, 전남은 81만9000마리로 1년 전보다 각각 91.6%, 5.1% 증가했다.

닭의 경우 광주는 61만마리로 1년

전보다 53.8%, 전남은 2137만마리로 1년 전보다 12.9% 증가했다.

그러나 젖소는 송아지 생산 감소, 사료비 부담으로 인한 사육포기 농가가 증가한 탓에 사육 마릿수가 소폭 감소했다. 광주는 637마리로 1년 전보다 3.3%, 전남은 3만마리로 1년 전보다 3.3%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은미기자 emlee@kwangju.co.kr

대기업·中企간

상권분쟁 조정

공정성 높인다

정부가 대·중소기업 간 상권 다툼을 해결하는 사업조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분쟁이 늘면서 이 제도를 투명하고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중소기업청은 사업조정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우선 대·중소기업의 상권 분쟁에 대한 강제조정안을 의결하는 기구인 사업조정심의회에서 소비자 전문가가 심의위원을 맡을 수 있도록 했다. 대학 교수와 정부 관계자, 법조인, 업계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심의회에 소비자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한 것이다.

대·중소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도 상권 분쟁의 이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을 수용해 제도를 보완한 것이라고 중소기업청은 설명했다.

아울러 사업조정 제도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서류를 열람할 수 있게 했다.

중소기업청 관계자는 “사업조정제도를 활용하는 사례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며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공정한 결정이 내려지도록 하는 것이 제도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길”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전국투자자 교육협의회

광주 DJ센터서 특강

전국투자자 교육협의회(회장 황건호·이하 투교협)는 9일 오후 4시 광주시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세계경제 전망과 투자전략’ 특별강좌를 개최한다.

강사는 국내 가치투자 1세대로 통하는 장인한 KTB자산운용 대표이사다.

장 이사는 최근 유럽 재정 위기 등 글로벌 금융·경제·이슈 분석 및 전망을 바탕으로 바람직한 투자방향, 포트폴리오 관리 방안 등 투자전략을 소개할 예정이다.

수강 대상 제한은 없으며 선착순 200명이다. 참석자들에게는 투교협의 자산관리 총서 ‘펀드투자 제대로 하자’ 책자가 무료 제공된다. 문의 02-2003-9452.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